



공정정보도

2012-1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선관위 디도스 공격 첫 보도서 최구식 왜 빠졌나”

10대 뉴스 선정의 투명.공정성도 논의

제4기 노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10.26 재보궐 선거일 발생한 사이버 공격 사건의 주동자인 여당 의원 비서관을 ‘국회의원실 직원’으로만 적시해 보도한 경위를 파고 들었다.

연합뉴스는 ‘국회의원실 직원이 재보선날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이란 제목으로 첫 보도를 하고는 1시간쯤 뒤 ‘최구식 의원 비서관이 재보선날 선관위 공격’이라고 ‘종합’했다.

반면 다른 매체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최구식 의원실 비서’나 ‘여당 의원 비서’라고 특정하면서 일부 미디어 여론 시장에서는 ‘연합뉴스가 은폐·축소 보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노측은 “경찰이 엠바고를 걸어 미리 배포한 자료 기사이고 정치부도 이미 엠바고 해제 시간 전 최구식 의원임을 확인한 상황이었다”며 첫 기사가 오해를 살 만한 제목으로 나간 경위를 캐물었다.

사측은 “기사 작성 시점이 점심시간과 맞물리면서 취재된 팩트의 이관이 늦어지는 등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사는 또 연합뉴스가 선정한 ‘국내 10대 뉴스’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노측에서 공정보도위원회의 고흥규 간사, 류지복 부간사, 강훈상 총무, 김성진 기자협회 지회장,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사측에서 김성수 편집상무, 이래운 편집국장, 장운주 국제국장, 김용수 지방국장, 김장국 통합뉴스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수 기사심의실장은 옵서버로 함께했다.

다음은 회의 주요내용 요약.

◇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 노측 =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수사 결과를 전하는 첫 보도가 ‘국회의원실 직원이 재보선날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이란 제목으로 나갔다.

본문을 봐도 여당인지, 야당인지조차 알 수 없다. 사회부 사건팀에 확인해보니 자료기사라고 한다. 오후 1시30분 엠바고를 달아 오전 11시에 배포됐다고 한다. 자료에도 여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확인이 안 됐다더라.

다만 최구식 의원이란 소문이 있어 데스크에 보고하고 정치부에도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한다. 정치부 작성기사를 보면 ‘참고’라고 해서 오전 11시57분에

최구식 의원실 직원이란 게 확인됐다.

엠바고 풀린 시점이 오후 1시30분이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이버에서 타매체 기사를 검색해봐도 1시30분 이후 첫 보도에서 대부분 언론이 최구식 또는 여당이라고 못 박았다.

우린 첫 기사로부터 1시간 뒤에 나간 종합 기사에 최구식 의원실이라고 적시했다. 그 한 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우리 기사가 일부러 최구식의 이름을 뺐다는 공격을 받는다. 부서 간 공조의 문제인가.

■ 사측 = 점심식사 시간 직전 최구식 의원인 것 같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치부에 의원실 반응을 알아보라고 했다. 취재 시점이 식사 시간과 겹친 데다 부서장의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원실 취재 내용이 뒤늦게 사회부로 이관됐다. 그러니까 토스가 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최구식이란 이름은 오전에 들었지만 그 당시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뒤에 확인해서 기사가 나갔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매체들은 대부분 1시30분부터 최구식 이름을 적시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나온 기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나중에 덮어쓴 기사도 시간은 1보가 나갔던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1시30분 1보가 나갔을 때 최구식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나중에 종합이나 대체기사에서 실명을 넣으면서 송고시간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매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누구를 봐준다는 차원의 사안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기사가 많이 나갔다. 부서 간 협조 문제, 애매한 시간대에 기사를 다루는 문제 등에서 반성할 점이 있는 사안이다.

◇ 국내 10대 뉴스 선정

■ 노측 = 10대 뉴스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궁금하다. 특히 당초 10위 뉴스로 구제역 확산이 뽑혔는데 최초 투표 결과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도 똑같은 표를 얻어 동률이었던 것으로 안다.

물론 이 구제역 뉴스는 연말에 터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뒤늦게 1위로 추가되면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 1면에 이어

■ 사측 = 예년과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논설위원실, 기사심의실, 제작실,국장, 에디터, 편집국-지방국-통합뉴스국 부장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안철수 바람이 1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2위였다.

10위는 동물로 4건이 나왔는데 편집국에서 이걸 갖고 투표해 2건(디도스 공격과 구제역)으로 압축했다. 편집국장이 독자적으로 여기서 하나를 선정하기 어려워 편집상무 주재 실국장회의에 올렸고 거기서 투표를 통해 구제역 확산으로 정해졌다.

10대 기사가 선정된 직후 김정일이 사망했는데 편집국장 재량으로 그걸 1위로 올리고 10위인 구제역은 뺐다.

■ 노측 =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후보로 안 올라왔다.

■ 사측 = 부장들에게 3~4개씩 후보를 내라고 했다. 자기 부서와 관련한 뉴스로 국한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에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선정하는 올해의 주요 뉴스를 참고해 후보작 18개를 정했다. 내곡동이나 한진중공업 사태는 부장들이 제출한 후보작에는 없었다.

■ 노측 = 지금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과 그 아들, 대통령부인의 형부와 사촌동생, 대통령 측근 등등 개별적으로 터진 사건들이 많다. 이전 정부 때였다면 아주 크게 부각됐을 만한 사안들이다.

내곡동 사저 등 단건으로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를 묶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할 듯싶다. 그게 좀 아쉽다.

■ 사측 = 사실 과거엔 투표를 안 하고 편집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판단을 모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후보를 받았고 그 이후 투표로 선정했다.

◇ 김인중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인터뷰 누락

■ 노측 = 지난 회의 때 김인중 전 경호처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샀다'고 한 부분이 새로운 팩트가 아니어서 다루지 않았다

고 사측이 설명했다.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 사측 = 김인중 처장 인터뷰 전 시사인에서 보도한 내용을 두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 기사에도 "실제로 계약은 대통령실, 이시형이 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 전 (내곡동)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는 표현이 있다.

■ 노측 = 사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만 한 것과 처음부터 대통령이 관여해 의 사결정을 한 것은 차이가 있다. 의도나 적극성에서 엄연히 다른 문제다.

■ 사측 = 대통령이 최종 결정 전 현장을 다녀왔다는 표현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안이 정말 편법 증여, 탈세를 위한 파렴치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보안을 유지하면서 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현재로선 판단이 힘들다. 나중에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고 관련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노측 = 노측도 파렴치 행위로 규정하고 가자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상식적인 선에서는 보도하자는 것이다. 의혹 제기에 나서지는 못해도 드러난 사실을 정리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 우수상에 '인권위 보고서 빼돌린 경찰'

연합뉴스 공정보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2011년 11월 이달의 참글상 수상작(우수상)으로 '경찰관이 인권위 내부 보고서 빼돌려'(사회부 조성흠,한미희) 기사를 선정했다.

수상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고문 의혹으로 인권위의 조사를 받던 양천경찰서에 대한 보고서를 빼낸 뒤 인권위에 공개 수위를 낮춰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어처구니 없는 비리를 단독 취재해 폭로했다.

인권위가 유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행태도 함께 고발했다.

수상작은 경찰과 인권위 두 국가기관의 안이한 도덕성과 국민을 기만하고 임무를 해태한 실태에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고 따갑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두 기관에 불리한 사실인 만큼 취재가 까다로웠을 텐데도 팩트 확인을 충실히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연합뉴스 공보위는 이달 18일까지 올해의 참글상 수상작을 추천받는다.

올해의 참글상 후보는 2010.12~2011.11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기사 8건과 사원들이 추천한 기사가 대상이다.

수상작에는 상금 200만원(대상 기준)도 주어진다.

